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Vol.36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하였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기대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별첨1][보도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보도자료 녹색전환 9.20)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30대 그룹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15개 그룹의 ESG 활동을 분석한 'ESG 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요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는 주로 지배구조 관련 이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개 그룹의 48개 위원회는 평균 5.4번씩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 수는 평균 5.5명으로, 이들의 위원회 참석률은 대단히 높은 편(98.1%)이었습니다. 전체 안건을 분류해 보면 ESG 전체 방향에 관한 관리 안건(34.9%)과 지배구조 안건(32.3%)의 비중이 컸고 이어 일반 경영 및 투자 안건(17.4%), 사회(S) 분야(10.2%), 환경(E) 분야(4.4%) 순이었습니다. ESG 회의에서 환경 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지배구조(G)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총 137건, 전체 안건의 20.9%)하는 게 ESG 위원회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승인한다거나, 내부 거래 실적을 보고하고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를 승인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공헌(46건)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이어 안전 및 보건(12건) 인권(4건) 등의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환경 분야의 논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는데,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전략 안건(17건), 친환경 사업 관련 안건(12건) 등이 다뤄졌습니다.

"기업 ESG위원회 주요 안건은 '내부거래 승인'" (한국경제, 9월 20일자 보도)

2. 국내 상장사들의 ESG 공시 의무화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허위 ESG 공시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ESG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0곳으로 이는 지난해(80건) 대비 40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358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한 해(236건)보다도 50%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들에만 의무가 부과되고, 지속가능보고서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자율 공시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24년에 시총 5000억원 이상 기업에까지 의무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에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 공시를 통한 그린워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공시 제도가 확립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월마트나 HSBC, DWS운용 등 유수 기업들이 허위 ESG 공시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당국도 ESG공시 의무 확대를 앞두고 허위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국제 컨퍼런스에서 "ESG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며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ESG 공시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는다면 과징금이나 소송과 같은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ESG공시 방지 위해 강화될 감시…기업들 '이해·리스크 관리' 필요해 (뉴스투데이, 9월 20일자 보도)

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제4차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ESG 공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30여개 위원사의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 ESG 공시 관련 글로벌 논의 대응 ▲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 정비 ▲ ESG 평가 투명·전문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공시-평가-투자 ESG 생태계 전반 제도기반 확충" (연합뉴스, 9월 16일자 보도)

DR&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2022년 Vol.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H. www.draju.com